

한미동맹과 한일관계, 그리고 국내문제의 해결(강의노트)

세종대학교
호사카 유지

I.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동향

1. 웬디 셔먼 국무차관의 발언

- 2015.2.27. **웬디 셔먼**(Wendy Ruth Sherman, 66) 미국 국무차관, 전후 70주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동북아시아의 과거사 갈등과 관련, 한국과 중국, 일본 3국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비판.
-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**양비론**(兩批論)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발언이 문제가 됨.
- 웬디 셔먼의 발언 : “정치지도자들이 **과거의 적을 비난**하면서 **값싼 박수**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, 그런 **‘도발적인 행동’**은 진전이 아니라 **마비를 초래**할 뿐.”
- 발언 가운데 한중 양국 정치지도자가 ‘도발’한다고 규정.

2. 셔먼의 수습 움직임

- 2015.4.10.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**안호영 주미 한국대사**, 사사에 겐이치로(佐佐江賢一郎) 주미 일본 대사를 잇달아 면담.
- 셔먼 : 안호영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"**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. (한국 내 비판 여론을 접하고) 굉장히 놀랐다**"는 반응.
- 셔먼 : 4월 초 **미국-이란 간 핵협상 타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**을 한 인물.
- **북한 핵문제 대응 방향**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안호영 대사에게 설명했을 가능성.
- **셔먼 발언** : **대 북한 문제를 생각할 때 한중일이 역사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취지**였을 가능성.



웬디 셔먼과 안호영 미 한국대사

3.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

-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(요미우리신문 서면 인터뷰) : "한·일 관계의 역사적 민감성을 인식한다."
- "3국 간의 협력이 가져오는 **잠재적 이익이 과거의 긴장이나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.**"
- "**미국, 일본, 한국**이 함께 **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**에 최선의 대응을 하고, 역지력을 증강하며 지역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."
- "3국(한·미·일) **안보 협력 강화**가 미국의 '**아시아-태평양 재균형**' 정책의 핵심 요소로,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."
-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**한·미·일 공조 복원의 시급성만 강조.**
- 요미우리신문 : "역사 갈등의 책임이 한국과 중국에도 있다는 취지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2월 발언과 같은 흐름.", "카터 장관이 비판을 각오한 채, 향후 미국의 '**재균형 정책**'에 영향을 줄 수 있는 **한일 관계 현상 타개를 호소했다.**"



2015년4월9일 처음으로 방한한 카터 미 국방장관

4. 북일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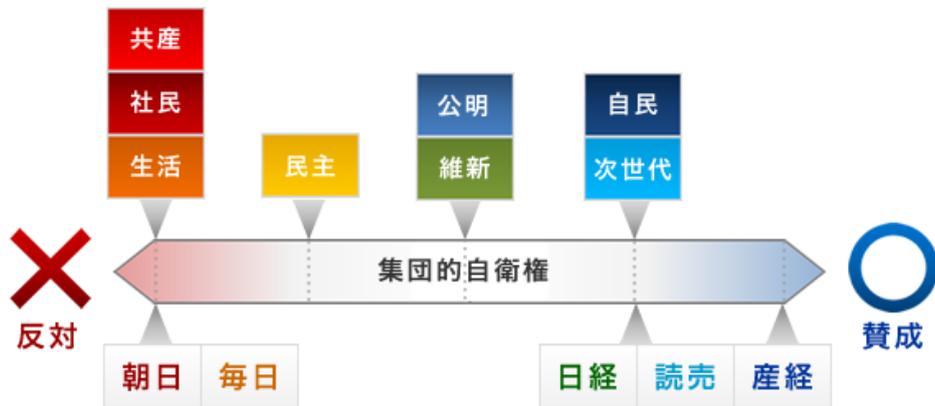
- 아베정권이 들어선 후 북일관계 한 때 급진전.
- 아베 신조 : **원래 대북 강경론자, 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, 후 북일 수교 주장.** 대북 강경 정책 추진 주인공.
- 일본의 북한학자들의 비판 : 대북강경정책으로 북일관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.
- **이에 선후 전략의 순서를 철회.**
→ 2013. 5. 이지마 참여 북한 파견,
2014. 5. **북일 공동성명.**
- 2014. 9. 북한, 북한 내 일본인 정보를 일본에게 주지 않았다. 이후, **북일관계 다시 냉각.**

5. 오바마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

- 2015.1.22. **오바마 대통령 : “북한은 결국 붕괴한다.”**
- “그런 종류의 독재 체제는 지구상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.”
- **“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.”**
- **“군사적인 해결책은 답이 아니다.**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어 전쟁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.”
-
- 오바마 대통령 : **“군사적인 해결책”보다 “인터넷이 더 효과적일 것”**이라고 밝힘.
- 미국의 북한정책 : 군사적 해결책이 아님. 그러면 ?

6.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

- 2014. 7. 아베정권,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각료회의(=국무회의) 결정.→ 자위대법 등 세부법안 개정 검토.
- 2015. 4.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동 요건 결정.



일본의 정당과 언론사의 '집단적 자위권'에 대한 입장 차이

*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동 요건

- 2015.4.17 : 일본정부, 자위대 해외 파견 요건 담은 정부안을 결정, 사실상 확정. 여당의 반대 없음.
- 자위대 파병 요건(일본정부안)
 - (1)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, 일본 국민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.
 - (2) 일본의 존립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력 행사 외에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.
 - (3)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그쳐야 한다.
- → '존립 위기 무력 공격'으로 규정.

- 2015. 4.16~17.(워싱턴D.C.) : 제7차 '한미일 안보회의(DDT)' 공동 보도문 발표.
-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**한국의 주권을 존중**하기로 한미일 3국이 확인.
- 보도문 : "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**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** 개정될 것", "이러한 노력이 **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**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**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**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".
- '**제3국**' : **한국**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.

6. 아베 총리의 미국양원 합동연설의 의미

- 2015.4.29. **아베 총리, 미국양원 합동연설.**
- 일본의 자위대를 세계 각지에서 **미군을 대신해 투입하려**는 미국(특히 공화당)의 소원 때문에 아베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의미. **일본 측 로비의 결과.**
- 한일간의 역사인식의 갈등보다 **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** 결정.
- 3.26. **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** : "아베 총리에게 4월29일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해달라고 초청했다."
"아베 총리의 연설은 **미국인들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** 부터 경제와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."
- "여기에 **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**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들이 포함된다."

- 미국에 대해 일본의 안보협력과 경제협력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.
- 경제협력 : 일본의 **아베노믹스**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역설해 미국의 경제정책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침.
- 일본도 **국익**을 위해 **외교전**을 벌이고 있음.

Ⅱ. 한국과 일본의 선택

1. 오바마 행정부의 상황

- **2014.11. 중간선거에서 패배**→ **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**.→ 오바마 대통령, **사실상 레임덕** 상태→ 그러나 지지율이 아직 50%(2015.1.)이상.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→ 이럴 경우, 국내 **경제문제와 외교에 힘을 쓰는 경향**.→ 차기 대선(2016.11)을 위한 행보.

2.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적 관심사

- (1) 북한 핵 문제
- (2) 중국 문제(군사확증, AIIA 문제 등)
- (3) 러시아, 우크라이나 문제→ 크림반도 문제

- (3) 중동문제(이란, 시리아 등)
- (4)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IS문제
- (5) TPP(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) 체결문제
기타

3. 일본의 선택과 문제점

- 세계의 **안보문제**와 **경제문제**에는 모두 **미국이 개입**한다는 기본적 인식.
- 일본이 **미국의 관심사를 공유**하려는 경향.
→ 아시아에서의 북한문제 해결과 중국의 대두를 막기 위해 **한미일 공조 강조**.
- 일본 우파정권의 한계→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**한국에 대해 역사인식문제와 영토문제로 도발**.
- 처음은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한 일본은 현재 **정상회담을 서둘지 않는다는 입장**으로 선회.→
2014.10.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외교회담과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.
- 2015.4. 일본이 **2015년판 외교청서**에서 '**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**'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한국을 '**가장 중요한 이웃나라**'로만 기재.
- 2015.4.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켜 '**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**', '**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**' 등의 문장을 사용.

- 일본이 **한일공조를 요구**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**역사인식과 영토주장을 한국에 수용하라**고 요구.→한일관계 악화의 주된 요인.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하는 나라로 변했다.
- → 한국의 **국제적 위치의 부상과 중국과의 접근**이 주된 요인.
- → 험한 시위(=헤이트 스피치)의 주도세력= 재특회 : 재일한국인의 특혜를 용납하지 않는 모임→ 한국인이 위협세력이라는 인식.
- → 기존의 우익세력이 아님.

4. 한일간의 여러 문제

- (1) **위안부문제**
 - (2) **독도 영유권 문제**
 - (3) 일제시대 **강제 징용자**에 대한 배상문제→ **개인청구권 문제**
 - (4) **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**
 - (5) **역사인식 문제**
 - (6) **개헌과 군대부활문제**
-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현재 한국정부는 군사문제(집단적 자위권 문제, 북한문제 등)와의 **분리 대응 방침**을 고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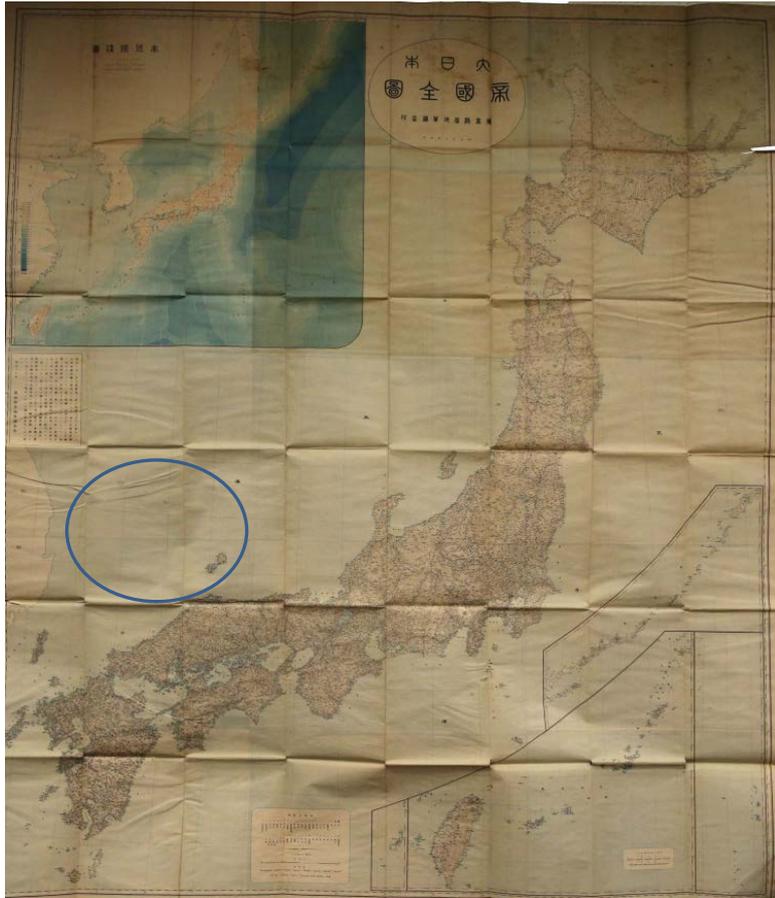
Ⅲ. 한국의 바람직한 선택

1.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외교 구상

- **한일, 한중 관계**는 한미동맹에 비해 **부차적인 관계** → 현실.
- 한일, 한중 관계는 주로 경제관계, 그리고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협력적 관계.
- **사드 배치문제** →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문제에 대한 물리적 방어체제가 강화. 한미동맹이 확고해짐. 한미일 공조에 기여.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긴장되고 중-북한 관계를 접근시킬 우려가 있음. → **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**. 중국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한국의 외교력이 절실하다. 한국이 외교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국제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.

2. 일본과의 역사갈등문제, 독도영유권문제는 연구와 국민교육, 해외홍보로 극복

- 1) 독도영유권 문제
- **과시용 실효지배 강화 대책을 되도록 줄이는 것.**
- **연구 강화,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 필요.**
- 세계적 석학에 대한 연구의뢰.
- 독도관련 **우수논문의 영문화, 불문화 등 추진.**
- 세계 여론을 움직이게 하는 전략이 필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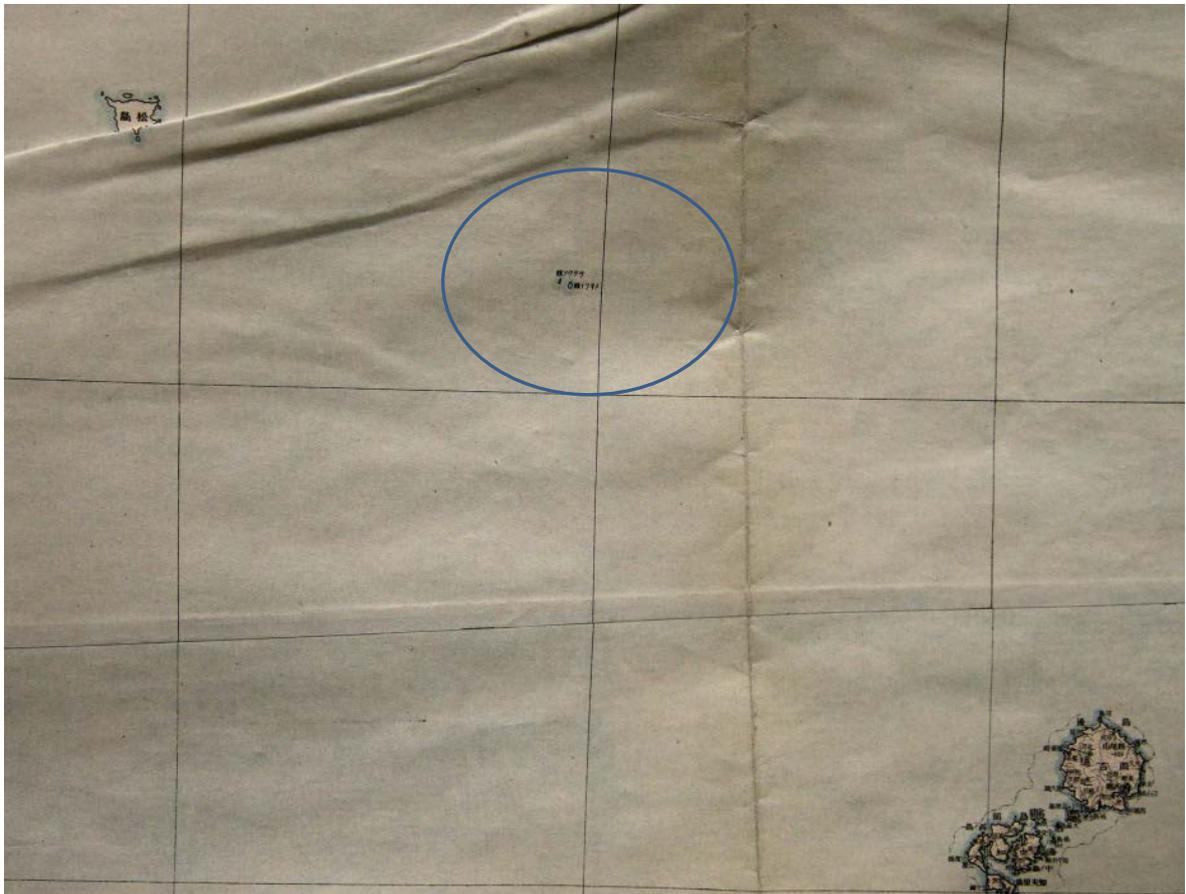
대일본제국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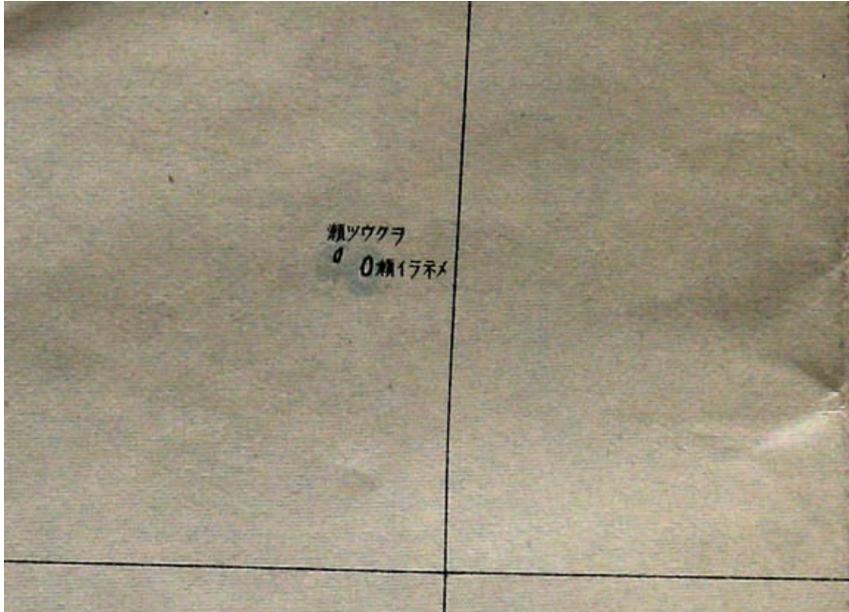
(1897) :

일본 **농상무성**(현재, 농림수산성+경제산업성)이 제작한 **공식 지도**.

이 지도 속에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같은 하얀 색으로 분류되어 있고 **독도** 이름이 **러시아명**으로 기재되었다.

일본이 스스로 **독도**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 **조선영토**임을 밝힌 공식지도.





독도의 서도를
올리부취, 동도
를 매넬라이로
러시아명으로
표기.

이 명칭은
1854년 러시아
선박이 독도를
발견하여 붙인
이름이다.

일본은 적어
도 독도가 일본
의 고유영토라
는 거짓말은 즉
각 그만둬야 될
것이 아닌가.

- 3)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개인청구권 문제
- 일본의 사법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는다.
- **1991년 일본정부의 국회에서의 답변참조.**
- →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기재된 의미는, 개인청구권을 보호할 국가의 권한이 소멸되었다는 뜻이지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뜻이 아니다.
- 4)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→ 미국자체가 일본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있다.
- 5) 개헌과 군대부활문제 → 일본이 미국과 같이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된다면 일본 내에서 **빈번히 테러가 일어나게 될 것**이다. 일본 국민들은 그런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.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 많은 일본국민들이 군대부활에 반대할 것이다.

IV. 한국의 여러 문제 해결의 근본 =대한민국 헌법

- 1. 헌법적 가치
- 대한민국의 가치의 원천
- 국내문제 해결의 근본
- 평화통일로의 방법론
- 경제문제 해결의 지침
- 분열된 국민의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

2. 대한민국 헌법 전문(前文)

-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**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**과 불의에 항거한 **4·19 민주이념을 계승**하고, 조국의 **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**에 입각하여 정의·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,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,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**자유민주적 기본질서**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**기회를 균등**히 하고, **능력을 최고도로 발휘**하게 하며, **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**하게 하여, 안으로는 **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**을 기하고 밖으로는 **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**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**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**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.

- 제1조
-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
-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- 제4조
-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,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.

- [제119조]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.
- [제119조]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,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,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

